

북한의 최근 경제개혁과 지방공업의 발전 전망

1. 지방공업의 의의

사회주의 국가의 지배장치는 일당독재 체제 및 계획경제 시스템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특히 공산당 지배는 계획경제 시스템으로 형성된 '독점적 자원배분권'을 바탕으로 한다는 점에서 계획경제 시스템은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는 핵심적 요소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일당독재 체제라는 상부구조는 계획경제 시스템이라는 하부구조와 상호 의존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특성으로 인해 계획경제 시스템의 주변부에 위치하여 국가의 통제력이 상대적으로 덜 미치는 '지방공업'은 사회주의 체제의 변화를 이해하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 특히 아직 사회주의 체제의 변화 양상이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는 북한의 경우, 경제현상 및 정책의 진행방향과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방공업의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사회주의 계획경제 시스템에서는 '계획의 일원화·세부화 원칙'에 따라 중앙정부가 모든 생산 및 분배를 장악, 관리한다. 그러나 모든 생산수단을 전부 중앙정부가 관리하지는 않는다. 관리의 효율성 제고 등 현실적인 필요에 따라 지방차원의 소규모 생산수단의 운영관리는 지방에 위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중앙정부가 직접 관리하지 않고 지방차원에서 관리하는 공업을 '지방공업'이라 한다. 1920년 구소련에서 생산수단의 국유화, 협동화와 함께 계획경제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지방공업'이란 개념이 등장¹⁾하였으며, 이 개념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사회주의 국가의 확산과 함께 동유럽, 중국, 북한 등으로 전파되었다.

북한도 해방 후 구소련으로부터 계획경제 시스템과 함께 지방공업이라는 개념을 수용하여 경제운용에 활용하기 시작하였다. 북한은 지방공업을 '지방원료 원천을

1) 최신평, 북한의 산업관리체제와 기업관리제도, 산업연구원, 1998, p109~110.

동원하여 주로 인민소비품에 대한 지방적 수요를 충족시킬 목적으로 창설되고 지방 경제기관들에 의하여 지도, 관리, 운영되는 공업²⁾으로 정의하고 있다. 다른 사회주의 국가와 마찬가지로 북한의 지방공업도 ① 지방차원의 소규모 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② 인민소비품, 즉 경공업 제품을 주로 생산하고 있고, ③ 지방의 노동력 및 물자동원에 의해 건설, 운영되며, ④ 지방의 당(黨) 및 행정조직에 의해 지도·관리하는 공장 및 기업소를 총괄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2. 지방공업의 발전 과정

북한은 해방 이후 사회주의 계획경제 시스템을 수용하면서 지방공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하였으나, 본격적으로 지방공업에 대한 발전전략을 수립한 시기는 1958년경이다. 북한은 생산수단의 국유화 및 협동화를 완성하여 계획경제의 기초여건을 구축하고, 제1차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중공업 우선주의에 입각한 경제개발 전략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 그러나 경제개발 과정에서 국가자원이 중공업 분야에 집중됨으로써 인민소비품의 생산 위축이 나타났다.

이에 따라 주민생활 유지에 필요한 경공업 생산을 위한 투자는 지방 단위의 유휴

자원을 활용함으로써 중앙의 생산체제를 보완코자 하였다. 1958년 6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대규모 중앙공업공장들의 건설에 계속 힘을 돌리면서 동시에 전 인민적 운동으로 지방공업을 발전시키는 병진(並進)정책’을 채택하였다. 이를 실천하기 위한 과제로, ‘지방의 모든 원천을 동원하여 전 인민적 운동으로 인민소비품 생산을 발전시킬 것’을 제창하고 ‘각 시·군에 한 개 이상의 중소 규모의 지방공업 공장들을 건설할 과업’을 설정함으로써 지방공업의 본격적인 육성에 나서게 되었다.³⁾

북한이 지방공업을 육성코자 한 이유는 다음과 같이 볼 수 있다. 첫째는 지방의 원료와 자재, 노동력을 동원함으로써 국가차원의 큰 부담 없이 빠른 시일내에 생산시설을 건설하고 인민소비품을 생산할 수 있는 것이다. 둘째는 경공업 발전에 대한 국가의 추가 투자를 줄일 경우 국방공업과 중공업 발전에 더 많은 투자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셋째는 농촌이나 농촌 인근에 공업시설을 설치함으로써 농촌 지역의 공업을 육성하고 지방의 낙후성을 완화시켜 농촌과 도시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다.⁴⁾ 넷째는 여성, 노인 등의 유휴 노동력을 활용하고, 지방의 수입증대를 가져오는 것이다.⁵⁾ 다섯째는 원료산지 및 소비지에서 가까운 곳에 생산시설을 설립함으로써

2) 사회과학원 주체과학연구소, 경제사전 제2권,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5, p439.

3) 최신람, 앞의 글, p113~114.

4) 김성금, ‘지방공업의 부문구조를 개선완비하는 것은 군경제발전의 중요한 요구’, 과학백과사전출판사, 경제연구 1999년 3호, p32.

5) 김일성, 김일성저작집 제13권, 조선노동당출판사, 1981, p286.

원료 확보에 유리하고 수송비용도 줄이는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다.⁶⁾ 여섯째는 공업 시설을 전국적으로 분산시킴으로써 전쟁시 피해를 줄이고 전시(戰時)수요를 보장하는 것이다.⁷⁾

북한의 지방공업 발전전략은 중국 등 다른 사회주의 국가와 마찬가지로 중공업 우선의 불균형적 고속성장 전략, 자력갱생의 원칙, 혁명적 군중노선을 바탕으로 추진되었다. 그러나 지방공업은 정비된 체도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육성된 것이 아니었으며, 특정 시기에 대규모 캠페인에 의한 대중동원 방식으로 지방공장을 집중적으로 건설한 다음, 이후에 파생되는 기술, 원자재 등의 문제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었다.

1962년 8월 ‘지방 당 및 경제일군 창성 연석회의’를 계기로 평안북도 창성군에 대한 현지도도를 통해 지방공업 발전 모델을 제시⁸⁾하고 다른 지방에서 이를 따라 배우도록 했다. 이후 1970년 2월 및 1980년 6월 ‘전국지방산업일꾼대회’ 등을 계기로 대규모로 지방공업 건설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1980년 이후에는 대규모 지방공업 공장을 건설하자는 캠페인이 더 이상 전개되지 않았는데, 이는 기존의 방식으로는 지방공업이 성장할 수 없는 한계적 상황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대중동원에 의한 지방공업 공장의 건설이 한계에 직면하자 1984년부터는 ‘8·3 인민소비품 생산 운동’이 전개되기 시작하였는데, 이는 지방공장뿐 아니라 협동단체와 가내작업반, 부업반, 가내 편의봉사원 등을 통해 소비품 생산을 증대시키고자 하는 변형된 형태의 경공업 생산 증대운동이라 하겠다

3. 북한 지방공업의 운영 실태

북한의 지방공업은 1959년 지방공업에 소속된 공장 및 기업소가 2,000여 개로, 인민소비품 생산액의 45.1% 및 공업 총생산액의 27.5%를 차지⁹⁾하였으나, 이후 1960년대 후반까지 그 숫자가 큰 변동이 없어 정체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1970년 ‘전국지방산업일꾼대회’를 계기로 북한은 대규모 캠페인을 전개하며 한해 동안에만 1,760개의 지방산업공장을 건설하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알려졌으나, 그 이후 다시 양적 증가는 없어 1980년까지 지방공업에 소속된 공장 및 기업소 숫자는 3,300~3,600여 개를 유지하였다. 현재 지방공업 공장 및 기업소는 각 시·군에 20여 개씩¹⁰⁾ 전국적으로 약 4,000여 개¹¹⁾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지방공업 생산

6) 김성금, ‘군경제의 종합적 발전은 사회주의경제 건설을 다그치기 위한 중요한 요구’, 과학백과사전출판사, 경제연구, 1999년 4호, p13~15.

7) 김일성, 김일성저작집 제16권, 조선노동당출판사, 1982, p253.

8) 민주조선, 2002년 8월 8일자 보도.

9) 김일성, 김일성저작집 제13권, 조선노동당출판사, 1981, p403.

10) 리기반, ‘군을 단위로 지방경제를 종합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은 올해 경제건설의 기본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중요한 방도’, 과학백과사전출판사, 경제연구 1999년 2호, p10.

11) 최신평, ‘북한의 지방공업 : 발전과정과 관리제도’, 평화문제연구소, 통일문제연구 통권 30호, p264.

액은 1980년대 말 현재 경공업 생산액의 53.4%를 차지하고 있어, 1959년보다 경공업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다소 높아진 반면 1998년 현재 공업 총생산액의 21.8%¹²⁾에 머물고 있다. 이는 경공업 부문의 위축으로 1959년에 비해 지방공업 비중이 낮아졌음을 보여준다.

지방공업은 각 지방의 농업 원·부자재를 활용하여 해당 지역 주민의 생활을 충족시키기 위한 식품, 의류 등 경공업 제품을 주로 생산하고 있다. 지방공업에 소속된 공장 및 기업소는 농업과 관련된 식료품 가공공장과 가구, 학용품 등 일용잡화공장, 기타 생활필수품 생산공장 뿐만 아니라 중소화학공장, 기계제작공장, 금속소재공장 등 일부 중화학공장과 중소 규모의 탄광, 광산, 발전소 등도 포함하고 있다. 1980년대 초에 확인된 지방공업공장은 3,305개로, 분야별로는 일용품공장 32%(1,050개), 섬유공장 20%(647개), 식료공장 16%(534개), 기타 32%(1,074개)의 분포를 보였다. 지역별 분포는 평안북도(400개), 평안남도(391개), 함경남도(389개), 양강도(162개)¹³⁾ 및 개성직할시(149개) 순으로 분석되고 있다.¹⁴⁾ 유엔공업개발기구(UNIDO)가 1995년 6월에 발표한 보고서에서는 모두 4,041개의 경공업 기업들이 있으며, 이중 일용품공장이

30%(1,215개), 식료공장 17%(689개), 의류공장 10%(398개), 섬유공장 6%(235개), 제지공장 6%(225개), 편직물공장 2%(101개), 신발공장 1%(32개), 기타 28%(1,146개) 등으로 나타났다.¹⁵⁾

현재 북한의 지방공업은 내각의 경공업성이 총괄하고 있다. 과거에는 정무원내에 별도로 지방공업부가 있었으나, 1998년 9월 헌법 개정으로 정무원이 내각으로 개편됨에 따라 지방공업 관리기능이 경공업성에 흡수, 통합된 것으로 보인다. 경공업성의 지방공업지도국이 각 직할시·도의 지방공업관리국을 관장하고 필요한 사업지침을 시달하며, 각 직할시·도의 지방공업관리국은 도내 각 시·군의 지방공업을 지도, 감독하고, 각 시·군에는 별도로 지방공업관리부가 있어 지방소속 공장과 기업소를 관리하고 있다. 북한에서 각 시·군은 ‘행정=생산=소비’의 삼위일체가 이루어지는 기본 관리단위로, 지방공업 관리·운영에 관련된 문제를 직접 책임지고 있다. 각 시·군에서는 당위원회의 집체적 지도하에 인민위원회가 총괄적 권한을 가지며, 인민위원회의 지방공업관리부가 지방공업의 조직과 운영을 직접 지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¹⁶⁾

각 시·군은 역내 20여 개의 단위공장들을 하나의 종합공장체제로 묶어 운영하

12) 리기반, 앞의 글, p10.

13) 양강도의 경우 현재 도내 12개 시·군에 151개의 지방공장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평화문제연구소, 통일한국 2002년 3월호, p70).

14) 북한연구소, 북한총람, 1983, p832~835.

15) UNIDO, 한국개발연구원 역, 북한 경공업 발전 실행계획을 위한 주요 프로젝트의 검토보고서, 한국개발연구원, 1996, p7.

16) 김정길, ‘군을 단위로 지방공업부문들의 생산을 통일적으로 조직지휘하기 위한 방도’, 과학백과사전출판사, 경제연구 2000년 3호, p15.

고 있다. 원칙적으로 지방공업 운영에 소요되는 원·부자재는 60% 이상을 해당 지방에서 자체 조달해야 하며, 이를 위해 원·부자재의 생산에 필요한 자체 원료기지를 확보하도록 방침이 정해져 있다.¹⁷⁾ 지방공장 및 기업소의 규모를 보면 수백명의 종업원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도 일부 있으나, 대부분이 종업원 수십 명 정도의 소규모 기업이다. 종업원의 구성도 대다수가 가정주부 등이며, 일부 현대적인 설비를 갖춘 공장도 있으나 대부분 낙후된 설비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¹⁸⁾ 대부분의 지방공장은 자체수요 충족을 목적으로 하지만, 일부는 수출품도 생산하고 있으며 수출을 통해 획득한 외화로 외국에서 필요한 원료 및 자재를 구입하는 것도 허용되고 있다. 그러나 외국과의 무역은 지방공장에서 직접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중앙 및 각 도의 무역기관을 통해 이루어진다.¹⁹⁾

4. 중국의 경제발전과 지방공업

향후 북한의 지방공업이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에 대한 시사점을 얻기 위해서는 중국의 사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중국의 지방공업은 향진기업(鄉鎮企業)으로 대표되는데, 이는 농촌 소재 기업 중 국유기업 이외의 기업들을 총칭하는 것으로 농민들의 자본과 노동력을 기초로 향촌 정부나

개인 혹은 다양한 합작형태로 설립·운영되는 각종 기업군을 총칭하는 개념이다. 농촌 지역의 연합기업(聯戶)과 개인기업(個體戶), 사영(私營)기업이 모두 향진기업에 속한다.²⁰⁾ 향진기업은 중국 개혁의 기본전략인 放權讓利, 즉 '권한의 하부 위임과 이윤의 허용'에 따라 1980년대부터 급속히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중국은 1980년대 들어 농가의 자유생산 허용 등의 개혁조치로 농업생산과 농가소득이 급증함에 따라 농촌 내 잉여자금이 축적되고 농업 이외의 산업에 대한 투자가 가능하게 되었으며, 인민공사의 해체로 인민공사에 속해있던 농촌의 잉여노동력이 현실화되고 풍부한 저임노동력의 공급도 가능해졌다. 또한 재정개혁으로 지방정부의 재정자율권이 인정됨에 따라 지방정부가 재정수입 확대를 위해 각종 기업활동에 적극 나서게 되는 등 향진기업의 발전여건이 조성될 수 있었다.

중국 정부는 향진기업이 중국식 사회주의 건설에 선도적 역할을 한다고 인식하고, 향진기업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기 시작하였다. 1984년 기존의 사대기업(社隊企業)을 향진기업으로 개칭하고, 1985년 '향진기업제도 건설 실험구'를 3개 지역에 설치하는 한편, 향진기업에 대한 기술자문, 연구성과 이전 등 기술향상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였다. 1988년에 전국의 주요 지역마다 무역과 공업 및 농업

17) 북한연구소, 앞의 책, p832.

18) 이석기, 북한의 지방공업 현황과 발전전망, 산업연구원, 1998, p11~12.

19) 김성금, '지방공업의 부문구조를 개선완비하는 것은 군경제발전의 중요한 요구', p32.

20) 이보근, 중국 향진기업의 현황과 발전방향,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4, p19~20.

〈표〉 전국 사회 생산액 대비 향진기업 생산액 비중

단위 : 억 위안, %

구 분	전국 사회 생산액(A)	향진기업 생산액(B)	비율(A/B)
1979	7,642	548	7.2
1983	13,171	1,710	13.0
1988	29,807	6,496	21.8
1992	55,842	17,975	32.2

자료: 전재욱·최의현, 중국 향진기업의 발전과 국제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8, p30.

을 결합한 수출상품 생산기지를 건설하고, 향진기업과 무역업체간 직접 연결을 도모하는 등 향진기업의 수출산업화를 추진하였다. 이러한 제도적 기반을 토대로 향진기업은 중국의 경제발전 과정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하였다.

향진기업 발전의 주요 원인은 시장경쟁 메커니즘에서의 경쟁력 확보에서 찾을 수 있다. 국유기업과 달리 향진기업은 정부의 저리대출과 가격보조 등 각종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대신, 청부경영과 자율경영에 의거 경영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었다. 제품의 가격, 원·부자재의 조달, 종업원의 채용과 임금, 신제품 개발 등 거의 모든 면에서 향촌 정부로부터 기업경영의 자율성을 확보함으로써 국유기업보다 높은 시장경쟁력을 확보하였다.

이와 같은 경쟁력을 바탕으로 향진기업은 1979~94년 중 연평균 23.1%의 높은 실질성장을 지속하여 중국의 고도성장을 주도하였으며, 9,192만 명의 노동력(농촌 노동력 증가분의 65.6%)을 추가 고용하여 농촌지역의 방대한 잉여노동력을 흡수하였다. 또한 농촌의 소득증대에 결정적으

로 기여하는 한편, 국가에 대한 세금 납부와 향촌 정부에 대한 이윤 상납을 통해 재정수입 증대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나아가 1980년대 후반부터는 제품의 해외수출 증대를 통해 노동집약적 제품의 수출을 실질적으로 주도하고 있다.²¹⁾

5. 경제개혁 이후 지방공업의 변화 전망

북한은 작년 10월 김정일이 ‘강성대국 건설에 요구되는 사회주의 경제관리를 개선·강화하는 것에 대하여’라는 논문을 발표한 이후 ‘사회주의적 원칙을 지키면서 실리를 보장’하는 경제관리 방식을 작년 말부터 도입하기 시작하였다. 새로운 경제관리 방식은 ① 경제운영에 있어 내각의 역할 강화, ② 각 경제지도기관으로의 권한이양, ③ 공장과 기업소의 합리적 조직 및 관리운영의 개선, ④ 생산의 분화, 전문화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²²⁾

특히, 지방공업과 관련하여서는 ‘내각과 중앙경제기관이 여러 규정으로 아래를 얹어매 놓은 것이 많으므로, 중앙, 지방, 기

21) 서석홍, ‘중국의 향진기업: 그 발전과 성과 및 과제’, 한양대학교 중소기업연구소, 중소기업 1996년 봄호, p167~168.

22) 조선신보, 2002년 8월 5일자 보도.

업소의 임무를 전반적으로 검토해 현실적 조건에 맞게 바로 규정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이런 문제해결을 위해 시·군의 책임성과 창의성을 높이도록 권한을 주고, 풀어줄 것은 풀어주어야 하며, 중요 지표 이외에 세부 지표들은 시·군 자체 실정에 맞도록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다. 또한 지방공업에서 생산한 소비상품의 가격, 규격은 공장 자체적으로 제정하여 생산, 판매토록 하고,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도 물자교류시장을 통해 조달할 수 있도록 권한을 하부 위임한 것으로 알려졌다.²³⁾

1990년대 사회주의 시장의 붕괴 이후 북한은 외환부족에 따른 수입 감소, 중앙재정의 어려움 등으로 정부의 독점적인 자원 추출 및 재분배 능력이 약화되면서, 지방공업에 대해서는 각 지방에서 자체 해결토록 하는 조치를 도입하였다. 즉, 북한은 지방의 원·부자재를 활용하여 지방 내 수요는 자체의 생산으로 충족시킴으로써 시·군 단위에서 생산순환이 완결될 수 있게 경제구조를 다그쳐 왔던 것이다. 경공업 제품 이외에 석탄, 시멘트 등에 대한 수요까지도 자체로 충족시키고, 중소형 발전소를 대대적으로 건설하여 전력 수요도 자체해결하도록 요구하였다.²⁴⁾ 그 결과 중앙의 자재 보장을 받지 못한 공장, 기업소 등 지방공업 공장들은 각 단위들과의 상호교환, 매매 등을 통해 자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다.²⁵⁾ 따라서

이번 경제개선 조치는 기존에 비공식적, 부분적으로 이루어진 지방공업의 자력갱생 조치를 양성화하고, 이를 제도권으로 포용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북한의 경제난으로 파생된 지방공업에 대한 '위로부터의 강제된 자율성'이 향후 북한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미지수이나, 중국이나 다른 사회주의 국가의 사례에 비추어 볼 때 다음과 같은 추론이 가능할 것이다.

첫째, 각 지방별로 지방공업을 통한 자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가중되고 있는데, 이는 지방공업의 발전을 촉진시킬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각 시·군 단위로 재정수입과 지출을 맞추어나가는 지방예산제를 실시하고 있다. 지방예산제에 따른 수지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하는 경제적 토대가 필요하다. 각 지방 행정단위는 '이제 위에 손을 내미는 방법으로는 문제를 풀 수 없게'²⁶⁾ 됨에 따라 각 지방단위별로 지방공업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게 될 것이다.

둘째, 지방공업에서도 '평균주의를 청산'하고, '번 수입에 대한 평가'와 '일한 만큼 분배받는다'는 원칙이 정착될 경우, 지방공업의 운용성과에 따라 각 지방간 경제적 격차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셋째, 지방공업 관리자의 임명에 있어 정치적 고려 이외에 경영능력의 비중이 높아질 전망이다. 지방공업의 경영성과는 지

23) 김정일 지시문건 요약(중앙일보, 2002년 8월 2일자 보도).

24) 리기반, 앞의 글, p8.

25) 서남일, '북한의 공장관리 현실', 평화문제연구소, 통일한국 1996년 6월호, p86.

26) 조선신보, 2002년 7월 19일자 보도.

방의 재정수입과 직결되므로 각 지방의 당 및 행정기관은 관리자 임명에 있어 기업 내 다양한 관리업무와 생산기술에 대한 숙련도를 중요한 기준으로 평가하여 결정할 필요성이 높아질 것이다.

넷째, 중앙정부가 지방간 차이를 허용하면서 '주체적인 계획경제 관리원칙을 철저히貫徹하면서 구가이 주아지관저 토이저 지도를 확고히 보장'코자 할 경우, 지방공업의 생존과 중앙정부의 경제관리 방식과 마찰이 발생할 수 있다. 이 상황에서 각 지방단위별로 생존 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중앙의 계획경제의 영역에서 이탈하여 半合法, 半私的 경제로 진입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다.

다섯째, 기존의 공급 위주의 생산과 함께 수익 위주의 생산도 강조됨에 따라 각 공장, 기업소가 제품의 품질향상에도 노력을 경주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향후 남북경협이나 대외무역에 있어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북한의 지방공업이 중국의 향진기업과 같이 경제발전에 있어 선도적인 역

할을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개혁·개방 이전 중국은 농업 인구의 비중이 70%가 넘는 전형적인 저개발 농업국가였으며, 집단농업 해체와 개인 농업화를 통해 농업생산성을 제고함으로써 잉여인력을 배출하고 자본을 축적하여 향진기업을 발전시킬 수 있었다. 이에 비해 북한은 아직 계획경제의 틀 속에서 규제되고 있고, 농업의 비중이 낮아 농촌의 잉여자본 축적과 노동력 동원을 통한 공업화가 어려운 현실이다. 지방공업도 아직 기술수준과 생산시설이 낙후되었고, 지금까지의 약탈적 자원 동원으로 인해 중국과 달리 자체자본 축적 여건도 열악하다. 따라서 지방공업이 자체 역량을 축적하여 북한의 개혁·개방을 주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최근의 경제개선 조치에 가장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부문이 지방공업이고, 그 대응성과 여부에 따라 계획경제 시스템이 위심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방공업 변화에 대해 주시할 필요가 있다.

【柳承鎬】